

“도의원 정수 등 특별법 반영 적극 대처”

도의회 의회운영위, 의회사무처 등 행정사무감사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원내1)가 11일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윤수봉 위원장(원주2)은 “도의원 정수 관련해 도의원이 52명까지 있었으나 인구감소와 도농통합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현재 40명에 불과하고 강원도 및 전라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도의원 정수 확대 특례안이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 출입 관련 민원인 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의회 청원경찰의 증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장연국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반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재차 제기되고 있다”며 “완산구청이 4급 서기관이 400여 명의 조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그 절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의정 공약으로 마련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특례안이 5개인데, 3급 국장급 신설과 정책지원관 5급 상향 등 도의회 특례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계약비율이 100%로 확인되는데, 서류전형은 할 때 경력을 합격자에 한해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면접단계에서 확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청에서 서류전형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에 대해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에도 없는 사항을 제보만 갖고 의회가 다시 확인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져 묻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믿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

타했다.

영영선 의원(정읍2)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최저 승진 연한은 1년이며, 평균적으로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상운영 주무관이 현재 7급인데 26년차이고, 현 직급에서 10년 4개월째 근무 중이다”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인사권 독립 이후 직급별 승진 기간에 차별이 크다는 비판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신속하게 개선하라” 권고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지원인력 등 정수를 늘리면, 어떤 규정에 의해 담당관실에 많은 인원을 배치한 것인지, 선제적 대응으로 담당관실 외에 전문위원실로 지원한 의회는 없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에서 발공된 특례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하는데, 부처 입장이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고, “강원도나 전남도에 비하면 도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전북특별자치도는 1995년 5개 시군이 도농통합했는데, 그 영향이 상당하고, 단순히 정치인들의 밥그릇 쟁기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입법정책관실이 1층에 위치한 것부터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위원실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으로 부족한 현실이고 7개월째 접어들는데 아직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현재 결원이 7명이고, 2025년 1월이면 퇴직자 포함 11명으로 예상되는데, 충원계획에 보다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지자체별 광역의원 감소 우려”

권요안 도의원, 행감서



권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많아져 민수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인해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강화에서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자치단체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또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결정돼 민의를 대변하는 소통창구가 더 많아야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 즉 자치 역량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돼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무수석 대상 질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자치구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은 곳은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북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4,661명, 도의원(비례) 40(4)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 3,616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인구 152만 1,877명, 도의원(비례) 49(5)명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하는 인구는 3만 1,058명이며,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인구 179만 3,747명, 도의원(비례) 61(6)명으로 도의원 1명당 2만 9,405명을 대변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 언론의 생명줄”

민주 김운덕 의원,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예산 증액 요구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원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심각한 저수지입니다.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을 더 전액 증액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운덕 의원은 제시한 증액 요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거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김운덕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고자 작정이나 한 듯하다”며,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면서, “지역신문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잠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인촌 장관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액 증액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김욱기 기자

이재명 대표 정부특보단장에

민주 안호영 의원 임명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특별보좌단(특보단)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이재명 당대표의 정부특보단장에 임명됐다.

특보단은 당현상 당 대표가 설치할 수 있는 자문기구지만, 이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대권행보와 연결 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보단이 자문 역할 뿐 아니라 정치적 지지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관측이다.

특히, 이번 인선은 안호영 정부특보단장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소통강화와 지지 기반 확대를 꾀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안호영 신임 정부특보단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이후 변호사로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안 정부특보단장은 여야 동료의원들로부터 정책 현안도 밝고 정부적 감각이 뛰어나 당내 소통은 물론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소통에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가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국정농단 진상규명 및 김건희 특검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불요불급한 광고비 대폭 조정하라”

도의회 기획행정위, 대변인·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 대상 행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감사관 등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변인실 한 해 광고비가 6억5,000에서 7억5,000만원이었던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11억원, 2024년에는 9억 9,000만원으로 한 해 광고비 예산이 갑자기 10억원 정도로 증가했다며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화로 도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 불요불급한 광고비는 대폭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인권문화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 참여인원

이 300명에 불과하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행사참여자가 적다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024년 10월 15일 대변인 광고비 집행 등 비위사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공무원 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고 전대변인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급과 직위에 따른 권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은 올해 정책제안은 184건 중 59건으로 전년도 245건 중 72건 반영과 비교하여 불 배, 반영

률이 2023년도 29%에서 2024년 32%로 3%p늘었다며 정책 제안 반영률과 보고서의 질적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영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해 8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의 인권역사현장을 발굴·조사해서 인권지도 제작하였는데, 작성된 인권지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지도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빈약하고 해외에 위치한 특성상 감사의 사각지대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 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보조금 정책포럼 최종보고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지방보조금 정책 포럼’(대표 서항경)이 지난 8일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정책 포럼은 서항경 대표의원과 김승범, 고경은, 황해숙, 최재기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부터 정읍시 지방보조금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과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읍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 및 부서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차원의 평가지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항경 대표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문제 개선 방안 마련 위해 노력해야”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정책국·대변인 대상 행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間に 걸쳐 실시되는 2024년 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은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 교육의 낮은 참여도와 도교육청의 문제점 개선 노력 부재를 꼬집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

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일어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케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케어, IT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소관 부서인 정책국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도교육청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문제를 들여다봤다. 교육재정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2025년도 기금 사용 계획과 그 사용 비율, 관련 기금 조예에 대해 질의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그에 대한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